



수신	각 언론사 경제부, 정치부, 사회부
발신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의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02-3673-2141)
일자	2016. 12. 21(수)
제목	[성명] '위증교사' 의혹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즉각 국정조사특위 사임하라(총 2매)

‘위증교사’ 의혹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즉각 국정조사 특위 사임하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증모의, 국정조사 방해 등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이완영·이만희 의원은 최순실 측근들을 만나 질의응답을 ‘사전모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실련>은 두 의원의 즉각적인 국정조사 위원직 사임을 촉구한다.

첫째, 이완영·이만희 의원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정조사까지 농단한 만큼 즉각 특위 위원에서 사임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이완영 의원이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고영태이며, JTBC가 이를 절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며 증인 답변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만희 의원도 박헌영 과장의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두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점을 흐려왔다. 위증교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정조사 위원직은 물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할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럼에도 두 의원은 위원직 사직을 거부하고, 이완영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간사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 관련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재벌 총수를 노골적으로 감싼 것은 물론,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 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잇따라 만나 탄핵안이 통과되어 국정조사 의미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빨리 끝내자고 주장까지 했다. 위증 모의에 이어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이완영 의원은 당장 국조 특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둘째, 사전모의·위증교사 의혹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위증교사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정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완영·이만희 의원에게 국정조사 활동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두 의원은 즉각 국정조사 위원직에서 물러나고, 위증교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중인 위원이 사안의 핵심 증인들과 어떤 목적으로 따로 만났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말을 맞췄는지 국민 앞에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특위는 정동춘 이사장과 박현영 과장, 고영태 씨 등 진술이 엇갈리는 증인들을 다시 출석시켜 여당 위원들의 사전모의·위증교사 의혹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사상초유의 헌정파괴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이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